



#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

2005. 1. 17

중소기업특별위원회



# 보고 순서



**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**



**부품·소재 산업 발전 전략**

**7.7 종합대책 실시간 관리시스템 시연**



#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

# 보고 배경



## 7.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

- 유형별·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체질강화 기본방안

## 종합대책 이후

- IMF권고, 경제양극화 대응방안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
- 중소기업 1만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를 보완하고
- 1.13 연두회견에서 중소기업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방식을 바꾸어 가겠다고 밝히신 내용을 반영

## 오늘 중기특위

-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확정



## I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

- 조사대상 : 7,581개 제조업체 / 5,065개 서비스업체
- 조사기간 : '04.10.7~11.15

# 경쟁력 실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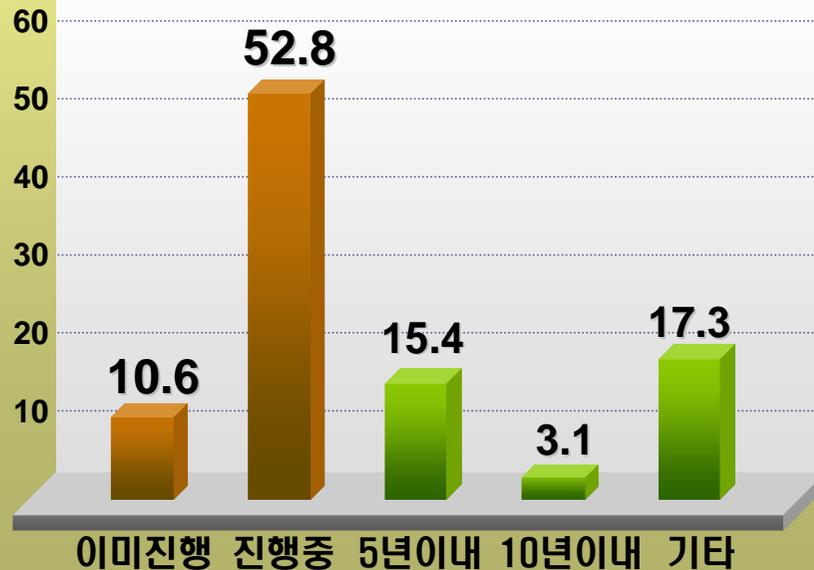
## 대다수기업 (63%)

● 주력상품이 이미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



● 지속 성장의 한계

### 중소기업 주력상품의 시장 축소시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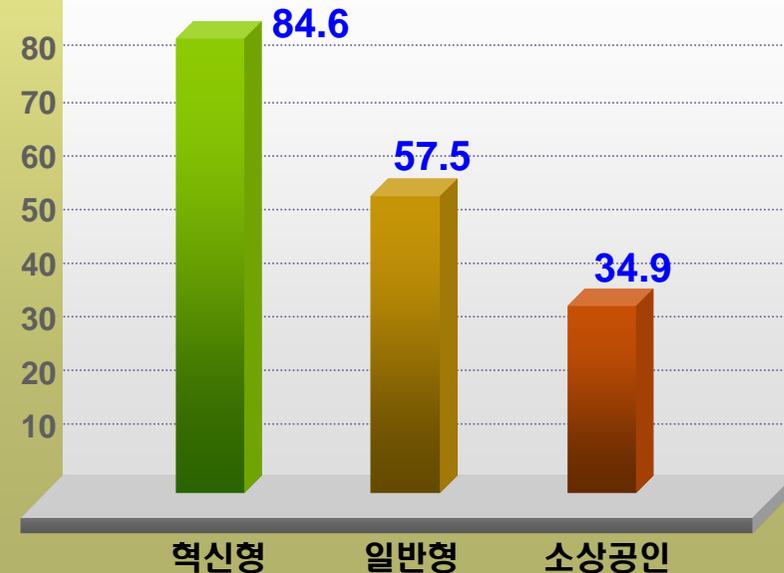
## 혁신형 중소기업

● 차기 상품 준비 (84.6%)



● 시장변화에 적기대응

### 차기 상품 보유 현황(제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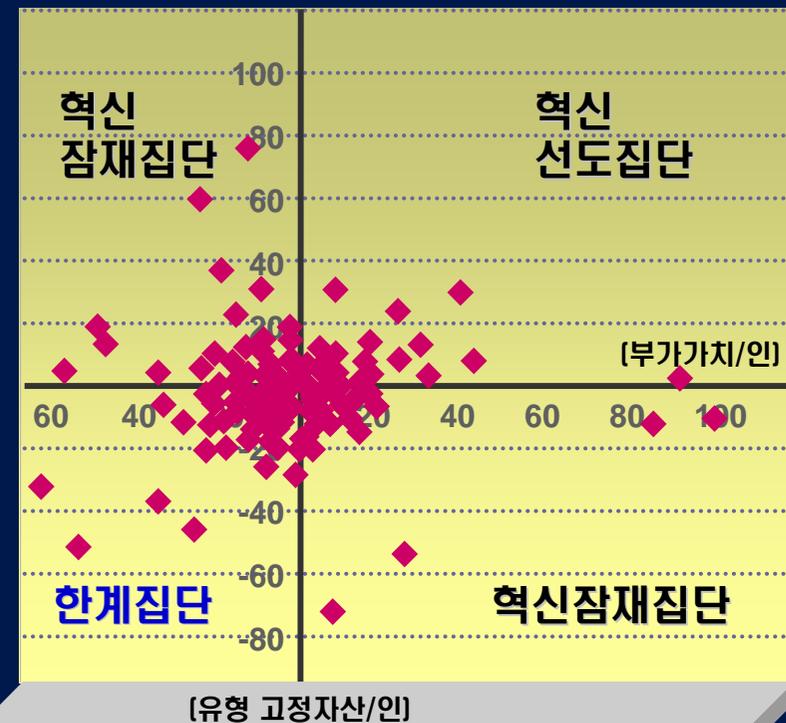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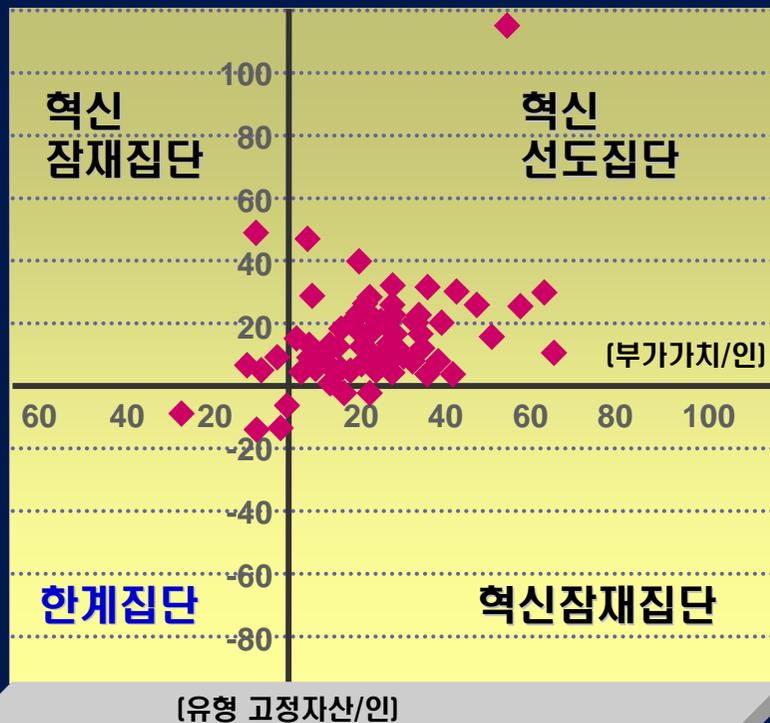


# 경쟁력 실태



외환위기 이후 한계기업 확대 → 양극화 심화

('91~'97) 0.9% → ('00~'03) 15.3%



# 성장단계별 실태



## 창업·벤처 단계

- 신제품 판로개척 어려움으로 매출부진 (37.1%)
- 투자시장 미성숙으로 자금조달 애로 (25.7%)

## 성장 단계

- 지속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애로 (42.4%)

## 구조조정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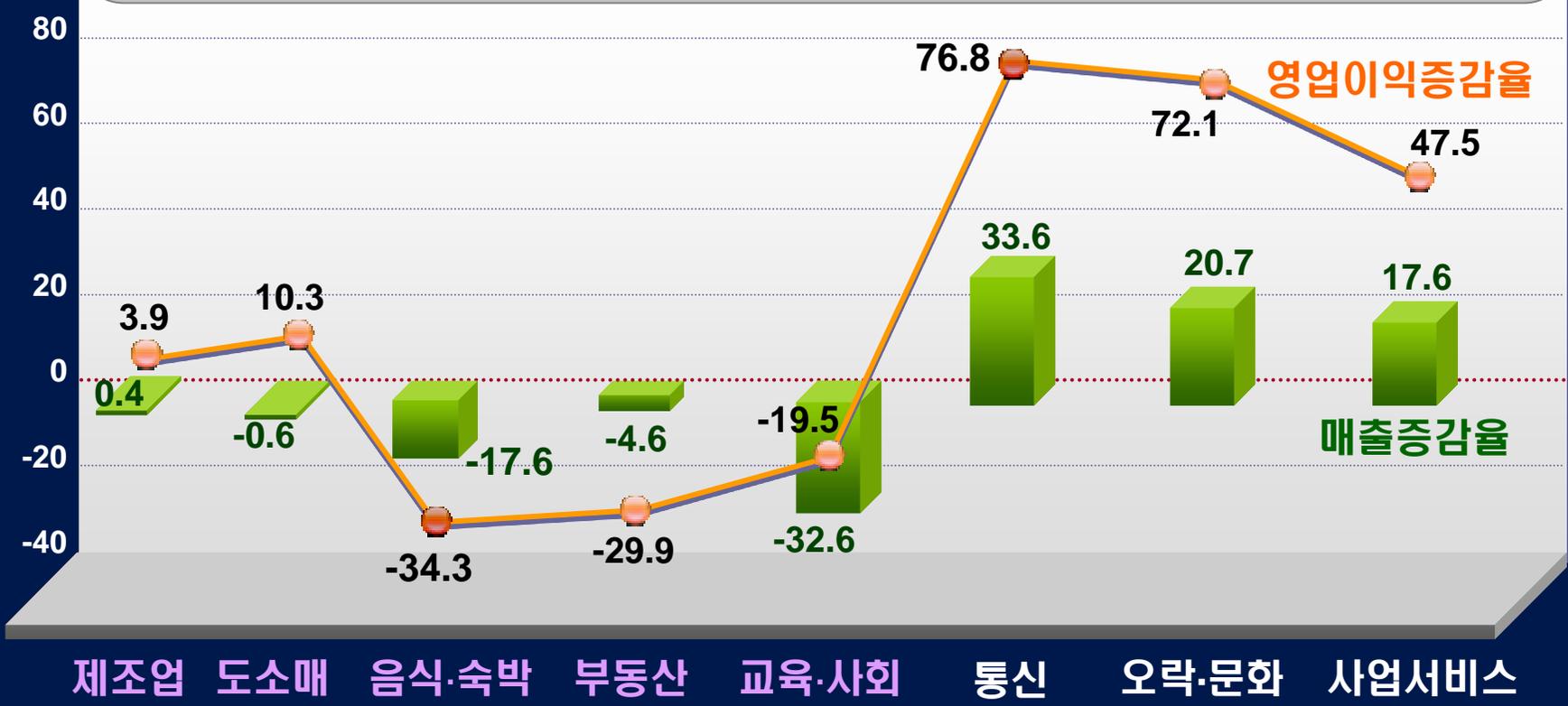
- 주력 상품의 시장 위축에 직면 (78.5%)
- 업종 전환 및 구조조정 지연 (28.9%)

# 업종별 실태



- 통신, 오락·문화 및 사업서비스업의 매출·이익 ↑
- 음식·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의 매출·이익 ↓

## 업종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감현황



# 기업규모별 실태



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영성과 ('04) 악화

매출액 :  $\Delta 6.6\%$  ↓

영업이익 :  $\Delta 15.5\%$  ↓

내수의존도가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부진

기업규모별 매출증감



기업규모별 영업이익 증감



# 한·일 FTA 영향



- 부품·소재와 기계·전자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
- 중장기적 영향 : 긍정적(21.6%), 부정적(16.4%), 중립의견(61.9%)

대일경쟁력 70% 수준이하 업체 비율



# 실태조사 결과 종합



- 경쟁력 약화, 판로·자금·기술인력 확보 애로,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→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
-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 
→ 여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유도

## ■ 중소기업정책 기본방향

- 보호·육성 위주
- 직접지원 위주
- 공급자 주도형
- 내수 의존형



- 자율·경쟁 촉진
-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
- 수요자 맞춤형
- 국제화 지향

## ■ 중소기업 육성전략

- 소상공인·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 추진
-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 참고

	소상공인	소기업	중기업	혁신형 기업
295만개	262만개	24만개	8만개	1 → 3만개
제조업 33만개	10인 미만 27.3	10~49인 5	50~300인 0.5	0.7 → 2만개
서비스업 등 262만개	5인 미만 234.3	5~9인 19	10~200인 7.5	0.3 → 1만개

## ■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 총력지원체제 확립 (행정기관 37개 2,794명)

- 지역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: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참고
-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중기특위 개최 확대(대구, 광주 기개최)  
➔ 중소기업의 정책체감도와 정책인지도 제고

# 중소기업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(12개)



성장단계별

벤처 기업 활성화

원활한 구조조정

업종별

부품·소재 기업 육성

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

기업규모별

소상공인 자생력 제고

대·중소기업 협력 강화

경쟁여건

획기적 규제혁신, FTA 중기대책

인프라

금융 시스템

기술 인력

시장 창출

시책 정비



## Ⅱ 중소기업 정책과제 (12개)

# 과제1 벤처기업의 활성화



## 종합 대책 주요내용 ('04.12 경제장관간담회 확정·시행)

### 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원 확충

- 투자펀드(1조 4천억원), 채권 보증(3년간 10조원),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비율확대로 투자확대 유도

### ■ 패자 부활 프로그램 도입

- 신용회복 → 도덕성 평가 → 사업타당성 평가 → 보증 및 대출

### ■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

- 일일 가격변동폭 확대, 등록후 매각제한기간 단축(2년→1년)

### ■ 비상장기업의 범익세 과세이연 등 개편

- 제3시장 참여기업확대,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

## 대책에 따른 여론

- **언론** : 벤처업계 회생의 발판을 마련  
발목 잡힌 경제에 활력을 부여
- **업계** : 지원대책 환영, 내실 다지기 다짐
  - 고용확대 : 이공계 미취업자 5천명 채용('05)
  - 벤처문화재단설립(100억원), 새싹벤처 지원
  -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100개 육성(~'08)

“가자, 벤처로”

新정책 힘입어 자금유입 기대감 고조  
창업 열기속 신기술 개발도 점점 활기

일부자 고정세 시장은 올  
펀드의 P/E 비율이 리시를  
벤처창업이 활기를 띠고,  
500벤처기업도 풍부한 자금  
으로 신기술 개발에 나서는  
4. 첫단추가 꿰어질 것으로 기  
고 말했다.

IT투자 정현실 이사는 "중기  
:상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  
: 추가로 정부 재정 5000억원  
: 벤처 부문에 투입될 것이라  
여기가 풀면서 민간 투자도 급  
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.

년까지 다산벤처 부사장인  
후 허브 전문업체 사장으로 나선  
이상광 회장을 사장은 최근 벤처계  
피탈로부터 리브를 받은  
이 시장은  
벤처계  
벤처계  
에 의해 증가세로 전망  
자기업 창업이 많아  
등이 벤처 시장을

## 시장 반응

- **벤처대책, 대통령님의 중소기업육성 메시지**
- **투자시장의 회복추세**  
\* 코스닥 지수의 지속 상승 등 투자분위기 확산



불붙은 코스닥 400 돌파  
벤처 붐등 기대 7개월만에 재탈환...6일새 10% 상승

강력한 정책 의지,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중소·벤처기업  
활력 회복의 계기 마련



## 현황 및 문제점

### ▣ 정책적 차별성 보다는 저금리 지원에 중점

- 중견기업 위주의 수혜
- 기업의 신용수준과 무관한 획일적 정책 금리 적용
  - \* 구조개선자금 : 4.9%, 수출금융 : 5.1%, 관광숙박시설 : 3.5%

### ▣ 일방적 시혜차원의 과도한 공적 신용공급 (IMF 정책권고) 참고

- 공적 신용보증에 대한 과다수요 유발
  - \*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 부담률 : 85 %
- 민간 보증시장에 대한 구축효과 초래

### ▣ 정책자금 운용기관간 효율적 연계체제 미비

- 유사 중복 지원, 사후관리 미흡 등

# 주요 대책

## ■ 정책자금의 역할 재정립 ('05.3)

- 창업·기술 사업화, 시설투자 등에 집중지원  
단순 운전자금은 취약 계층(소기업, 소상공인)에 중점 지원
- 성장 가능성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공급 강화

### 혁신형 중소기업

- 투·융자를 통한 창업초기 기업 집중 지원

### 일반형 중소기업

-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유도 (장기시설투자는 지원)

### 소기업·소상공인

-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

- 사업성 및 신용도에 따라 지원금리 차등화
-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등 우대방안 추진 ('05.3) 참고

# 주요 대책

## ■ 일반 보증은 상업적 베이스로 전환 ('05.9)

- 중소기업의 신용정도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차등화와 수지균형 도모
- 기술 보증 및 소기업보증 등 정책목적의 특별보증에 한해 손실보전

- 신용보증기금 → 일반형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전담
- 기술신용보증기금 → 혁신형기업 전담 보증지원기관으로 육성

- RIS 참여기업에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('05.6)

## ■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절차의 대폭 간소화

-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
  - ('03) 26% → ('05) 50% → ('07) 70%
- 중진공, 보증기관, 은행간 금융거래 One-Process 공급체계 구축 참고

## 주요 대책

### ■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의 개선

- 은행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확대 반영
- 총액한도 대출 지원방식을 보완 개선 ('05.3)
  - 네트워크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
-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 ('05.3)

### ■ 각 부처에서 운영되는 정책자금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

-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정책자금 연계시스템 구축완료 (금년중)
- 정책자금운용기관-기업신용정보회사(CB)-금융기관간 정보공유로 사후관리 기능 강화

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듯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계 완성

## 과제3 부품·소재 중소기업 육성



〈 산자부 장관 별도 보고 〉

## 과제4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



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 ■ 내수침체와 유통구조 변화로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

- '03년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체중 1년후 휴폐업률 : 18.6%

#### ■ 대형 할인점 증가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 위축 가속화 참고

- 대형할인점 증가추세 : ('00년) 164개, 매출 11조원  
→ ('04년) 268개, 매출 21조원

#### ■ 원활한 정책지원에 한계 노정

- 소상공인 수의 방대(262만개)와 업종의 다양성
  - \*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자로 빈번한 휴·폐업과 재창업 반복
- 종사자의 기술·기능 부족과 높은 연령
  - \* 재래시장 상인의 69.2%가 50대 이상

## 주요 대책

### ■ 컨설팅, 교육, 정보 제공을 통한 성공률 제고

- 상권정보(지역, 업종별) 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 개발('05.6)  
➔ 과잉진입 사전 예방, 자금지원시 사업성 평가 강화 등 참고
- 창업교육(실무 2개월 + 현장 1개월)과 자금지원을 연계 참고  
➔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토록 유도
-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·군단위의 『종합컨설팅지원센터』로 확대 개편

### ■ 소상공인 정보화 촉진으로 비용절감, 경영효율 증대

- '04년 : 37만개 ➔ '08년 : 100만개

## 주요 대책

### ■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('05.3)

-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 지원

### ■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가능한 업종으로 전환 촉진

-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, 전직교육 및 컨설팅 강화 (연 2만명)
- 업종 전환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

### ■ 잠재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지원 ('05.5)

- 은행 및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저리로 점포 대여 (2,000억원)
  -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임차 점포 제공 및 업종선정, 경영지원 등 조기자활 지원

# 주요 대책

## 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

- 상권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시장 특성별 지원
  - 지역특화시장 및 도심권 등 경쟁력 확보가능 시장 : 시설개선, 경영현대화 집중 지원
- 대형할인점 등과 경쟁이 곤란한 시장 : 용도전환 및 재개발 추진
-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센터 설립('05.3)
  - 온라인 점포 8천개 설치('05), 신용카드 단말기 등 지원 참고
- 공동물류, 저온창고 및 쓰레기 공동처리시설, 포장용기 공동개발 지원

소상공인 과당경쟁 지양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

● 소상공인 비중 : ('04) 89% → ('07) 87%

## 과제5 원할한 구조조정 지원



### 현황 및 문제점

■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업종의 창업이 급격히 증가

● 개인서비스업체수 : ('97) 223만개 → ('03) 244만개

■ 기술진보·글로벌 경쟁·중국경제 부상 등으로 경제환경 급변

➔ 적응력이 취약한 상당수의 중소기업(28.9%)은 업종전환·퇴출 희망

● 업종전환·퇴출 희망 비율은 도소매업, 중개업, 운수업 등 생계형 업종에서 높고, 종업원수·매출액 등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

■ 상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할한 사업전환 및 퇴출지원 체제 미흡

➔ 특히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체제 부재

## 주요 대책

### ■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M&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

- 벤처캐피털의 구조조정 투자시 일시적 경영지배 허용
- 신·기보 구상채권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, 시장 매각 유도

### ■ 소상공인 등 한계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('05.6)

- 시장전망, 경쟁력조사 등 유망업종·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
- 사업전환시 기업진단, 컨설팅, 자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자산매각·취득 등 사업전환 활동에 대한 세제·금융 지원

### ■ 한계기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정착지원

- KOTRA, i-PARK 등 해외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정보 제공 등



## 현황 및 문제점

■ 연간 기술인력 공급규모 : 24만명 (중소제조업 기술인력의 28%)

- 공고 7만명, 전문대 8만명, 4년제 공대 9만명 등
-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공급자원은 풍부

참고

■ 중소기업의 33%는 기술인력 부족에 직면 : 부족률 6.4%, 5.8만명

- 근무조건 열악, 대기업·서비스업 선호 등으로 중소기업 근무기피
- 실업계 고교의 위축 및 졸업생의 대학진학 급증
  - \* 실업계 고교 비중 감소 : ('00) 39% ➡ ('04) 35%
  - \* 실업계 고교 대학진학률 : ('95) 19% ➡ ('01) 45% ➡ ('04) 62%

■ 향후 기술인력 부족은 지속될 전망 (부족률 6~7%, KIET조사)

#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대책

## 목 표

- 5년내 기술인력의 부족문제를 50% 해소
  - 총 3만명 양성(공고생 2만명, 대학생 1만명)
  - 기술인력 부족률 : ('04) 6.4% ➡ ('09) 3%

참고

## 추진전략

- 공고 및 산업대·공과대학을 지역내 기술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
- 지역특성에 맞는 『맞춤형 산학협력』을 통해 기술 및 인력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

공 고

중소기업

대학진학

중소기업 복귀

##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 지원

-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근무가 가능토록 학부모·학교·기업간 『취업협약』 체결 및 맞춤형 기업현장교육 실시

### 공고생 (3학년)

-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 지급
- 중소기업 2년 근무기간, 입영연기
- 대학진학시, 대학등록금의 일부 지원

### 학 교

- 자율학교로 지정, 학교운영의 자율권 부여
- 교재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지원
- 공고 교사의 전문교육 무료 실시(산업기술대)

- 상반기중 지역별 실태조사후, 전국 16개 공고를 시범운영

- '06년부터 전국 공고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

5년간 2만명의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

##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인력 지원체계 구축

### ■ 대학의 교수연구실·실습실을 특화된 전문기술 인력양성의 산실(산학협력실)로 활용

- 중소기업, 교수 및 재학생이 1~2년간 기술개발 공동수행
- 졸업후 해당기업 취업 및 연구성과 이전 ➡ 인력, 기술 동시해결

### ■ 연간 5,000만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을 산학협력실에 지원

- ('05) 200개 ➡ ('09) 600개, 총 2,000개 지원
-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활용

### ■ 산업대(18개), 산학협력중심대(13개)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

- 향후 산학협력실을 산학협력연구소 형태로 운영

5년간 1만명의 특화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

## 재교육 등을 통한 기존인력 활용 확대

### ■ 지역별 『인력구조 고도화 기획단』 구성 및 훈련프로그램 실시

- 사업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『이동식 직업훈련서비스』 실시
- 온라인 기술교육 확대 및 개인별 교육훈련 자가진단시스템 보급

### ■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

- 근로자 본인 부담의 훈련비용 전액을 소득공제
- 단기해외 훈련비 및 대학등록금의 일부 지원

### 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및 자녀보육 지원

- 국민주택 특별 분양 확대 : ('04) 500 호 → ('05목표) 1,700 호
-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
- 자녀 보육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

## 과제7 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



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 서비스 산업의 발전 지연 → 고용창출, 성장 기여도 저조

-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음

미 국	일 본	한 국
77% [13%]	69% [11%]	54% [6%]

• 서비스산업 생산/GDP  
(비즈니스서비스/서비스산업)

#### IT 강국에 걸맞는 IT 기술활용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도 미약

- 국내시장 규모는 세계시장(약 7,000억불)의 0.9% 수준에 불과

####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과점

- 컨설팅업의 경우 맥킨지 등 외국계 회사가 시장규모의 50% 이상 점유
- S/W, 디지털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스타기업 부재

# 주요 대책

## 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- 표준산업 분류 정비 및 서비스분야 표준화 확대
-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

## ■ 제조기업과 관련서비스 기업군의 통합적 연계생산체제 구축

## ■ 디자인·컨텐츠·IT기반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

- 대형화를 위한 중소기업 범위 상향조정
- 문화컨텐츠 수출정보시스템(CEIS) 운영 활성화 참고

## ■ 유통·문화·건설·IT 등 업종별 생태분석 → 특화지원

〈 차기 중기특위에서 업종별로 순차 보고 〉

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/ GDP : ('03) 3.7% → ('07) 4.7%



## 현황 및 문제점

### ■ 시장개척능력 부족으로 OEM 방식 판매에 의존

- 일반시장 판매비중: ('01)18.3% → ('03)14.3%, 협력업체 비중 : 64%

### ■ 중소기업의 수출경험 부족 및 의지 미약

- 1년이내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체 : 10.6% 불과
- 수출의지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체 : 49.8%

### 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미흡

- 품질 신뢰성부족, 보수적 구매관행 등으로 신기술제품 구매 기피
  - \* 총구매액 중 신기술제품 구매비중 : 0.06% 불과 (19개 기관 조사결과)
- 중소기업제품 구매여부 판단기준 모호 및 점검체제 미비

# 주요 대책

## 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

-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,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 제정
- 소액 구매시(2억원 이하)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

## 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강화

- 구매의무 대상기관을 지자체 등 151개 기관으로 확대
-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확대 ('05년 100억원)
- '신기술제품 성능 보험제도' 도입

## ■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(5.1조원, 70%)

## ■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CATV 추진

- 시장정보 제공, 소상공인 경영교육, 판로개척 등

공공구매 규모 및 비율: ('04) 51.6조원, 63.4% ➡ ('07) 72조원, 70%

## 주요 대책

### ■ 해외진출 지원체제 강화로 수출개미군단 양성

- 해외유통시장, 국제조달시장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
\* 해외시장 개척의 주된 애로는 정보부족 (38.6%)

- 수출인큐베이터(9개), 해외지원센터(38개) 등을 통한 현지 지원 참고 참고

- 전문업종중심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 ('05년 2000개 업체)

- 해외마케팅 지역전문가 양성

\* BRICs 등 신흥시장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대학내 설치·운영

- 사이버 수출상담 활성화 → 창업초기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지원

\* 중소기업 10만개(5인 이상)가 평균 2백만불 수출시 연간 2천억불 수출 가능

중소기업 수출액·비중 : ('04) 985억불, 38.8% → ('07) 1,575억불, 45%

## 과제9 대·중소기업간 협력강화

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 ■ 대기업 측면

- 단기성과에 치중, 납품단가 인하 요구 빈발
-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에 신뢰부족

#### ■ 중소기업 측면

- 기술혁신역량 미흡 : 기술의 85%가 2년내 모방 가능
-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→ 협력 파트너로서 지위 약화  
\*1개 대기업당 중소기업수 ('92) 72개 → ('02) 162개

#### ■ 거래관계 측면

- 대·중소기업간 교섭력 차이 →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

# 주요 대책

## ■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산 유도

-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보완 및 신규 제정(서비스업종) 참고
  - 사업상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등
- 전자입찰·경쟁입찰제 활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

## ■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강화 : ('04년) 4만개 → ('07년) 7만개

-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, 발주 취소 등 애로분야 조사 중점 참고

## ■ 대·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·운영

- 대·중소기업 협력모델 발굴 및 협력사업 알선·지원

## 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

-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『지역 대·중소기업협력단』 구성 (대한상의)
  - 지방중소기업 컨설팅·교육지원

공정한 협력을 통한 대·중소기업간 동반발전

## 과제10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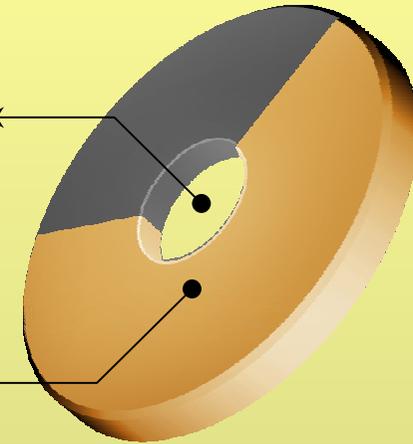
### 현황 및 문제점

■ 규제 개혁 위원회 등록규제 ('04.12현재) : 총 7,732건

- 중소기업 규제는 5,175건으로 총 규제의 67%를 차지
- 법령 이외 훈령, 예규 등에 근거를 두고 인·허가, 신고, 제출 등 규제가 광범위하고 다양

중소기업 관련규제  
5,175건 (67%)

총 7,732건



■ 분야·단위규제별 개별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으로는 실효성 한계

➔ 기존 규제개혁 틀을 넘는 혁신적 규제개혁 방안 필요

# 주요 대책

## ■ 우선, 계획입지내 중소 제조 및 서비스업체 규제자유화 시범 추진

- 필수 규제만 존치시키고, 여타 규제는 일괄 철폐 (네가티브 방식)
  - \* 국민건강 보호, 산업재해·안전, 환경오염배출 기준 등
  - \*\* 대지안에 조경의무,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등
- 계획입지(국가공단, 지방공단, 농공단지)에 시범적용 후 점차 확대

## ■ 추진일정

- 부처별 필수 규제 조사중 ('05. 1)
-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개별규제별 타당성 검토 ('05. 3)
- 적용할 필수 규제항목 선정 ('05. 4)
- 총리실과 협조하여 규제개혁기획단내에 『중소기업규제개혁특별팀』을 구성하여 획기적인 시행방안 마련('05. 6)



### 현황 및 문제점

- 전세계적인 FTA확산으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
  - FTA(WTO 통보) : 총 300건, 발효 150건 ('04.11)
-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FTA개념 및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
  - 한·일 FTA 추진상황을 알고 있는 업체는 14.8%에 불과
- 단기적으로는 상대 국가에 따라 품목별로 부정적 영향 우려
  -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산업 품목(예: 한일FTA, 부품소재)의 경우  
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
    - \* 미세한 가격경쟁 우위 소멸로 기술혁신 의욕 저하 우려

# 주요 대책

## 기본방향

- FTA에 능동대처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계기로 활용
  - \* 외환위기 직후 『수입선다변화제도』 폐지시 오히려 상당수 품목이 경쟁력을 강화
-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일관되게 추진
-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빈자리는 벤처·창업 활성화로 대처
- 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증대를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대로 연결

## ■ 우선, 부품·소재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

- 원천 기술 및 중소기업형 품목은 획기적 R&D 지원

## ■ 내수 위주 중소기업을 수출산업군으로 전환

-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협력지원센터 설치
- 글로벌 경쟁능력을 갖춘 수출기업 육성

## ■ 업종별 기술 격차와 상대국 특성을 반영한 FTA협상 전략 수립

- FTA 발효시기, 유예품목 및 유예기간 결정 등

## ■ FTA대상국과 사전 기술협력 확대

- 공동 기금 및 양국 중소기업 협력 위원회 설치 등

## ■ 신속한 구조전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

- 경쟁력 약화업종의 합리화 및 근로자 전직훈련 지원

## ■ FTA의 긍정적·부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 및 대응방안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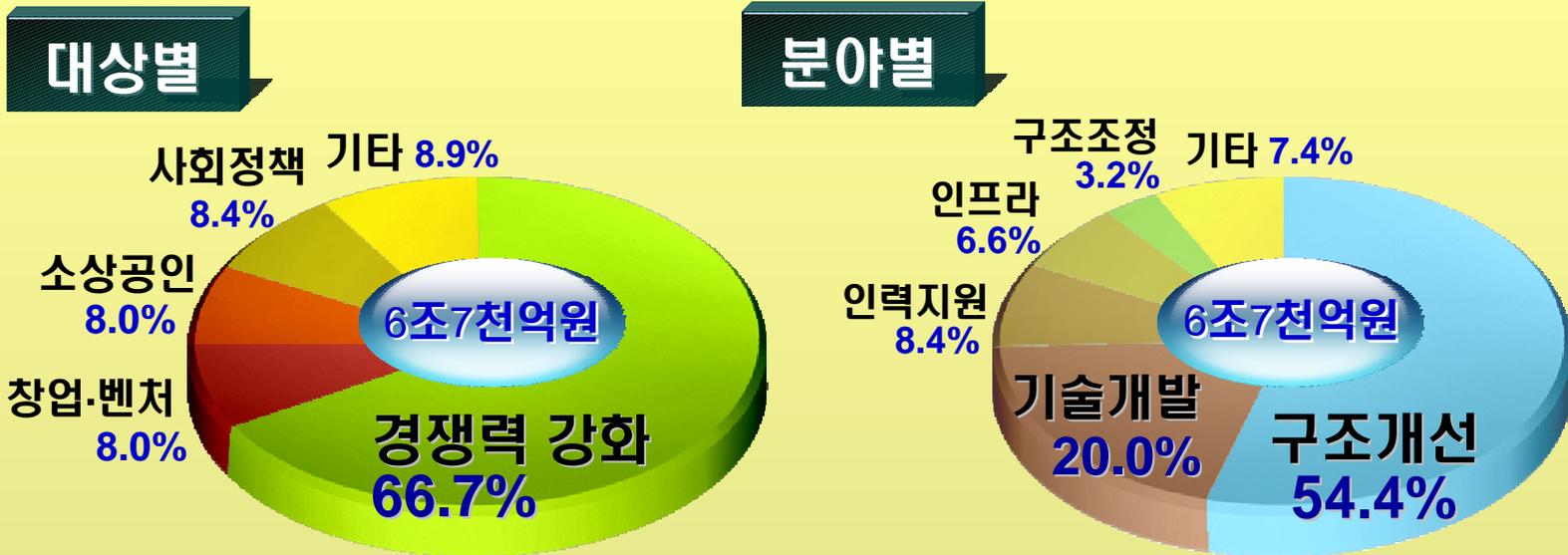
FTA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

# 과제12 중소기업 지원 시책 정비



## 현황

중소기업 지원시책은 234개 재정지원사업(14개 부처)으로 구성



- 형태별 (Form-based)**
- 정책자금융자 : 71%
  - 정책자금(융자) 수혜업체 : 5만4천개 (전체중소기업의 1.8%)

참고

# 정비계획

## 정비방향

- 중소기업 정책혁신 방향에 맞추어 지원시책을  
➔ 유형별·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전환
- 유사·중복사업의 통합·연계, 시책대상의 명확한 설정  
➔ 시책의 실효성 제고

## 정비내용

- 경쟁력강화 분야 : 146개 사업중 26개 사업 참고
  - 사례1 : 환경 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사업 (250억원)
    - 지원대상이 환경설비 수요자, 공급자, 환경사업자로 포괄적
    - 일반기업 지원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, 동사업은 혁신선도 설비 생산업체에 집중지원하여 국제환경규제 대응력 제고

● 사례2 : 수출금융 지원사업 (650억원)

- 100인 이상 기업 지원(38%)에 비해 20인이하 영세기업 지원(29%) 미흡
-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수출기업에 집중지원 되도록 보완

■ 창업·벤처 분야 : 26개 사업중 10개 사업

● 사례 :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 (200억원)

- 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·정보교류 확산이 목적이나 집적도 미흡(20.5%)
- 수출·법률 등 경영자문과 연구개발·시험생산 등 기능 보강
- 테크노 파크 등 지원혁신 거점과 연계하여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

■ 소상공인 분야 : 재래시장 활성화 등 5개 사업

■ 유사·중복 사업 : 창업보육사업 등 53개 사업



- 오늘 보고드린 정책과제중 계속 보완·발전이 필요한 부문은 세부계획을 추가로 마련하여 차기 중기특위를 통해 보고
-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위해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점검하고, 총괄조정기능도 강화하여 정책이행도를 높여나가겠음
- 오늘 보고와 토론을 통해 확정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에 배포(유인물, 인터넷 등)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음



#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 : 525개 38,369명

본문

## ■ 정부부처·청·지자체 : 37개 2,794명

- 중기특위, 재경부, 산자부, 정통부, 중기청, 16개 시·도 등

## ■ 유관기관 : 462개 31,753명

- 중진공, KOTRA, 신보, 기보, 기업은행, 수출보험공사,
- 소상공인지원센터, BI, 정보화경영원, 산업기술평가원, TTA,
- 디자인진흥원 등
- \* 지원서비스 : 시장·산업정보, 자금·보증, 인력, 기술·인증·표준, 정보화, 공공구매, 수출·마케팅, 컨설팅, 창업보육 등

## ■ 민간단체 : 26개 3,822명

- 중기협중앙회, 벤처협회, 대한상의, 무역협회, 여경협, 컨설턴트협회 등

#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방안



## <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전망>

	2004	2005	2006	2007	2008
계	10,000	13,000	17,500	23,000	30,000
이노비즈	2,800	3,500	5,000	7,500	10,000
기타 벤처형	7,200	9,500	12,500	15,500	20,000
(제조업)	(7,000)	(9,000)	(12,000)	(15,500)	(20,000)
(서비스업)	(3,000)	(4,000)	(5,500)	(7,500)	(10,000)

### ■ 국가 R&D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창출

- Inno Biz 지원사업 확대(중기청) : R&D지원, 컨설팅, 보증지원 등
-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(산자부, 정통부, 과기부 등)
- IT839 전략 추진에 따른 IT분야 선도기술기업 창출(정통부)

### ■ 지식기반서비스(KBS)산업 창출

- 통신방송네트워크설계(NI), 전자정부·기업정보화·전자상거래 등(SI), IT기반 경영·기술·엔지니어링, 마케팅·디자인·기술평가·인력지원서비스 등

## ■ 제3시장 참여기업 확대

- 현재 감사의견이 “적정 또는 한정”인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기업을 “벤처기업, 정규시장 퇴출기업”으로 확대  
→ 증권거래법시행령,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사항

## ■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

## ■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개편 방향에 공감

- 중소기업 전문 CB설립 등

## ■ 정책기조 강화를 위해 다음사항 개선 권고

- 부분보증비율 하향조정(85% → 50% 수준) 하여
  - 은행의 여신심사기능 강화
- 보증만기 연장기업에 고율의 수수료 부과하여
  - 중견기업에 의한 신용보증 독점현상 방지
-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
  - 은행과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통보

#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

## 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외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

- 중소기업 전문 CB설립 등

## ■ 현황

- 명시적인 규정 없이 중진공 지역본부별로 예산배정 운용  
\* 지방중소기업지원실적(%) : ('98) 53.5    ('00) 59.3    ('02) 60.1    ('04) 59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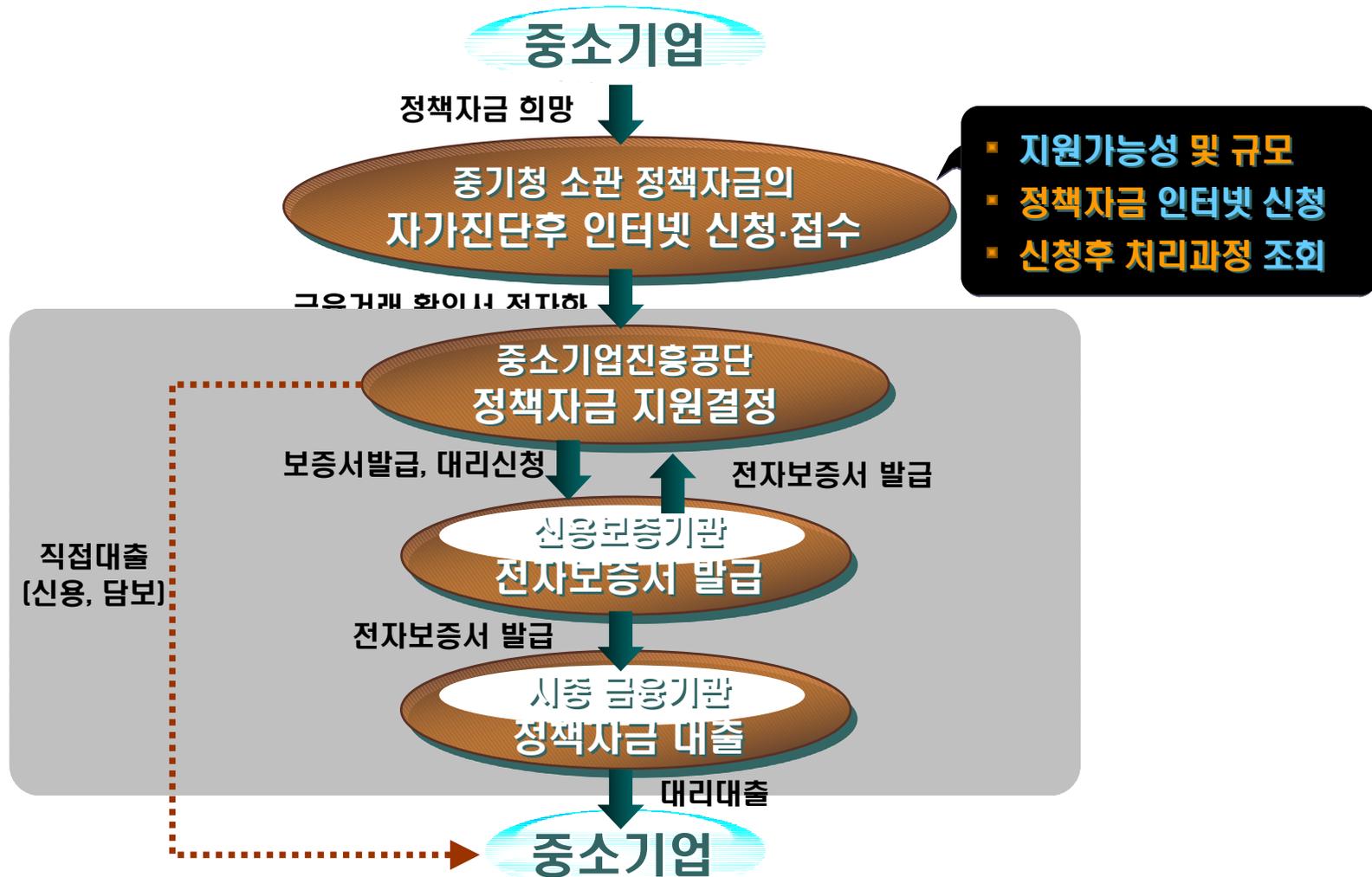
## ■ 운영방안

- 수도권이외 지역에 예산의 60% 배정
  - \* 5인 이상 제조업 비중 : 수도권 57%, 비수도권 43%
  - \* 금융기관 대출금 비중 : 수도권 67%, 비수도권 33%

## ■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가점비중 확대(1점 → 3점)

# One-Process 공급체계 구축

- 중소기업이 자금신청하면 인터넷망을 활용 최종 대출까지 일괄 연계 처리(보증서발급 전자화, 금융거래확인서 전자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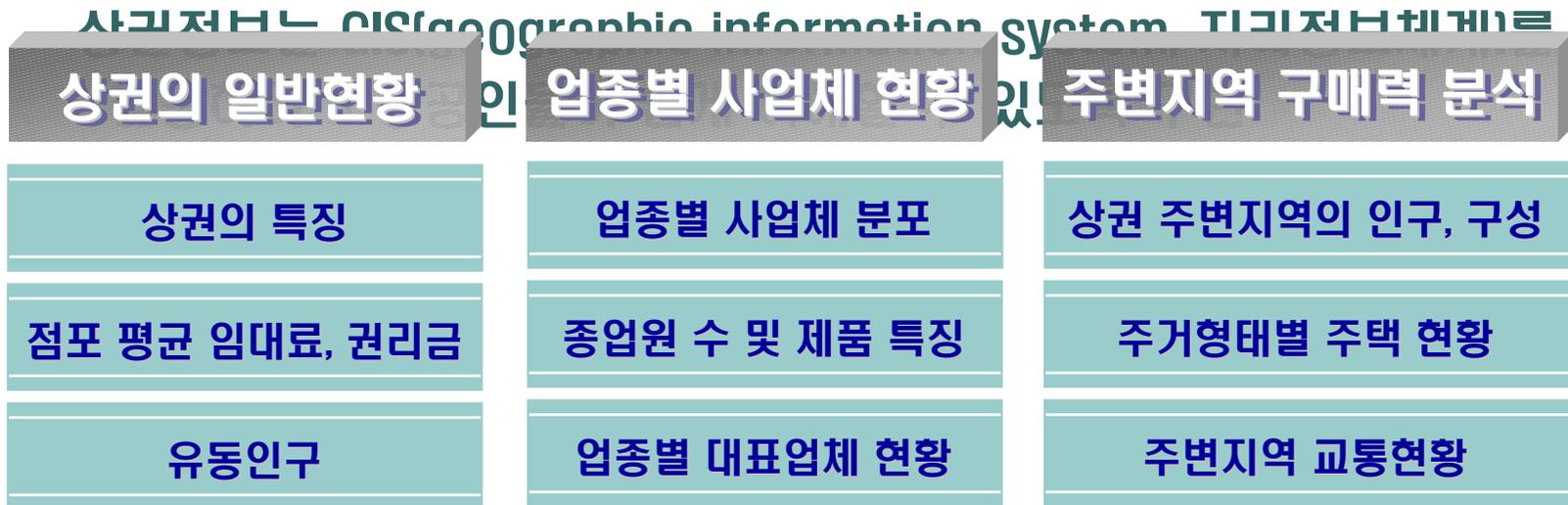


# 상권정보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 개발

본문

■ 정확하고 체계적인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합리적 업종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 업종배분 유도

- 다양한 상권정보를 활용해 특정 업종에 대한 수요·공급을 분석하여
- 수요대비 공급 수준을 지수화한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 개발



# 대형할인점 증가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 위축

## ■ 대형할인점 증가추이

연 도	00	01	02	03	04
할 인 점 수	164	192	230	254	268
연 매 출(조원)	11	14	18	20	21

## ■ 재래시장 현황

- 전국재래시장 : 1,695개(점포 23만개, 상인 30만명)
- 등록시장 매출액 : ('02년) 15조원      ('03년) 13.5조원
- 시설노후화률 : 시설불량 시장 54%, 주차장 부족시장 55%

# 창업자금과 자금지원을 연계



■ 2개월간 실무교육, 1개월간 현장경험 등 총 3개월 교육 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자금지원 결정



Off-line 교육과 병행하여 e-Learning을 활용한 업종별 사이버 교육  
 프로그램을 개발,공급한 계획

■ 중소기업청, 소상공인지원센터,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 결집



## ■ 온라인점포 분양(05~07년) : 총 18,000개

-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, 디지털 상인을 육성
  - \* 우수상품·지역특산품 온라인 거래(도·소매상, 소비자)
  - \* 전국 재래시장을 링크하는 포털 사이트(세일행사·이벤트 안내 등)

## ■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등 상거래 현대화

- 재래시장의 신용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단말기 보급
-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지원(5억원)
- 전화주문·공동배송 콜센터 시범설치 확대(현재 2개)
- 대형시장·전문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지원(8억원)

#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강화('04년 4만개 → '07년 7만개)



## ■ 실태조사의 연차별 확대

	'99	'01	'03	'04	'05	'06	'07
조사대상업체 (천개)	3	25	35	40	50	60	70
[원사업자수]	[1]	[8]	[9]	[10]	[12]	[16]	[20]
[수급사업자수]	[2]	[17]	[26]	[30]	[38]	[44]	[50]

-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, 발주 취소, 반품, 감액 등 실태조사 확대
  - 추가공사·물가상승분에 대한 대금미지급, 부당감액 등 불공정 특약조항을 가진 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병행
- 조사불응·허위응답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및 제재 강화

## ■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 운영('05.1.1부터)

- 상시 조사반 가동 및 직권현장조사 강화

#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개선 촉진

본문

## ■ 현재 사업자 등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[하도급법 제3조의2]

### ● 현재 건설·섬유·조선업종 등 16개 분야에서 운용중

- \* 16개 분야 : 건설공사, 정보통신공사, 전기공사, 건설자재, 조선, 전기, 전자, 섬유, 자동차, 기계, 건축설계, 엔지니어링, 소프트웨어, 음식료, 자기상표부착 제품

### 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(별점 감점) 부여

## ■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, 개선 및 보급 확대



### ● 신규로 서비스업종(8개 분야)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

###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 개선

- \* 사업상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, 긴급발주시 납기지연에 따른

## ■ 사업 개요(CEIS : Content Export Information System)

### ● 내용

-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기업정보 온라인 제공
- 문화콘텐츠 수출입 절차, 서식, 무역상담 지원서비스 제공
- 온라인 콘텐츠전시관 구축 : 200여개 업체, 1,000여개 콘텐츠 전시
  - \* 05년 490백만원 예산 반영(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관)

### ● 이용현황('04년말) : 일평균 2,130명 방문

## ■ 향후 운영 활성화방안

- 해외 전시회, 전문인력 풀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
- 해외거점별(중국, 일본, 유럽 등) 특화된 서비스 제공
-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국어 제공 및 온□오프라인 홍보강화

#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



부처명 (규모순)			
중소기업청	9	30,249	64.2
산업자원부	15	4,776	10.1
정보통신부	4	3,494	7.4
문화관광부	7	3,502	7.4
노동부	4	1,226	2.6
농림부	6	1,073	2.3
환경부	2	950	2.0
과학기술부	1	810	1.7
해양수산부	4	445	0.9
건설교통부	2	330	0.7
여성부	1	100	0.2
국방부	2	74	0.1
특허청	1	20	0.04
합계	58	47,049	100.0

## ■ 개요

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초기에 갖는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무역거점에 수출 Incubator를 설치하고 사무공간 제공, 법률 및 마케팅 등 지원

## ■ 운영 현황 ('04. 12월말 현재)

- 주요 수출 거점에 9개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중
  - 130개 중소기업 입주 □ 활용 가능 (122개 업체 입주 중)
  - \* 미국(워싱턴, LA, 시카고), 중국(북경, 광조우), 독일(프랑크푸르트), 일본(동경), 브라질(상파울루), 베트남(호치민)
- 수출실적 : '98~'04년까지 누계 4억 8,543만불, '04년 : 1억 5,365만불

## ■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경험이 있고,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외 민간 전문회사를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초기 해외진출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
-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한 용역프로젝트에 대하여 적정 해외지원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해결을 지원

## ■ 지원성과

구 분	'01년	'02년	'03년	'04.12월말	총 계
수출액(백만원)	130,754	59,100	282,081	211,732	68,667
투자유치(백만원)	7,830	1,800	2,067	12	11,709
현지법인(지사)설립	30건	18건	17건	35건	100건
전시회(박람회)참가	77건	58건	150건	183건	468건
기술제휴등 MOU체결	52건	27건	19건	112건	210건

#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가능 규모



■ 공학계열 기준 : 연간 24만명

구분	대상	공급규모
기능직	공고	209개 학교, 6.7만명
중급기술직	전문대, 기능대	158개 학교, 7.7만명
고급기술직	산업대, 공과대	189개 학교, 9.4만명

# 중소제조업의 기술인력 부족현황('04)



## ■ 직능별 부족현황

구분	기능직	중급기술직	고급기술직	계
근무인력(천명)	544.7	234.7	69.3	845.6
부족인력(천명)	37.6	15.7	4.6	57.9
부족율(%)	6.5	6.3	6.3	6.4

## ■ 부족업체(중소제조업의 33%)

- 업종 : 기계·금속·화학 등 전통제조업
- 규모 : 50인 미만의 소기업, 성장단계기업

# 분야별 정비대상사업

본문

## ■ 경쟁력 강화 분야 정비대상사업 (26개)

-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, 수출금융, 구조개선자금, 중소기업컨설팅, 중소기업유통지원, 해외 마케팅지원, 국내전시회지원, 무역인력양성, 전자상거래지원센터, 중소기업IT화지원, 산업 정보화 기반구축 등

## ■ 창업·벤처 분야 정비대상사업(10개)

- 창업보육센터운영, 상담회사용역지원, 소기업 및 소호창업지원, 중소·벤처창업지원 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, 벤처공동콜센터설치, BI창업성공 인프라구축,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, 엔젤투자시장구축

## ■ 소상공인 분야 정비대상사업(5개)

- 소상공인지원자금, 재래시장활성화, 시장재개발예탁금, 체인사업활성화, 소상공인지원센터

## ■ 유사·중복 사업(53개 사업)

- 창업보육사업, 환경관련자금, 민군겸용기술개발, 정보화관련사업, 유통관련사업,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, 고용장려금 등